금속노조통신 137호

■발행일 : 2019년 4월 11일(목) ■발행인 : 김호규 ■발행처 : 노조산전홍보실 ■스마트폰 m.ilabor.org / ■전화 : 02-2670-9507

"선 대우조선 매각 철회, 후 조선산업 부흥 논의"

10일 민주노총 영남권 조합원 결의대회 … "대우조선과 현중 모두 정몽준 하청기지 만드는 합병안"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대우조선 졸속매각에 반대하는 영남권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 매각 철회 후 노정교섭 등을 제안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4월 10일 경남 거제시 옥포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대우조선 매각반대 민주노총 영남권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등 영남권 조합원 3천 명과 거제시민들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으로 두 조선소 노동자 모두 구조조정 대상으로 몰리고, 한국 조선산업을 후퇴시킨다고 비판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을 묶어 한국조선해양지주로 재편할 계획이다.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을 계열사로 거느리는 형태다. 노동자들은 이 같은 계획이 인력 구조조정과 대우조선을 반껍데기로 만드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그룹에 속하지 못한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말라 죽어 한국 조선산업이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몽준 재산 불리는 특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역과 노동자를 배제한 대우조선 매각은 분명히 밀실매각이다. 수조 원의 공적자금을 들인 회사를 정몽준 부자의 재산을 불려주려 넘기는 특혜다"라고 매섭게 비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자본가와 정권이 밀실에서 노동자의 삶과 조선산업의 미래를 농단하는 현실 두고 볼 수 없다. 민주노총이 대우조선 매각을 반드시 막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상기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이 보릿고개 견디고 새 희망을 만들려는 새봄에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바치려 한다"라며 비통한 심경을 비쳤다. 산상기 지회장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지금 팔지 않으면 대우조선이 망한다고 한다. 동의할 수 없다. 노동자의 희생으로 4년 동안 대우조선을 정상화했다. 정몽준 특혜 알방 매각을 반드시 막아 내겠다"라고 다짐했다.

금속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우선 대우조선 매각을 철회하고 노동자들과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에서 "자본과 문재인 정권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을 갈갈이 찢어 울산, 삼호, 미포, 거제조선소를 모두 정몽준 재벌의 생산 하청기지로 만드는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이것이 대우조선 매각의 본질이다"라고 폭로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합병은 1 더하기 1로 2를 만드는 개혁이 아니라, 조선산업을 망가뜨리는 마이너스 합병이다. 세계의 산업 전문가들이 이 합병은 부적절하다고 고개를 내젓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우선 대우조선 매각 철회하라"

김호규 위원장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 투쟁을 조직하고, 거제시민이 함께하면 대우조선의 새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순리대로 조선산업 문제를 풀려면 우선 대우조선 매각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합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업결합 심사 단계에서 합병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은 "대우조선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팔다리가 짤리고 목숨을 잃은 수천 명의 노동자가 있었다. 대우조선의 주인은 거제시민과 노동자, 공적자금을 투입한 국민이다"라고 지적했다.

여영국 의원은 "대우조선의 문제는 주인이 없어서 아니라, 지금까지 주인인 척 행세한 사람들 때문이다"라며 "노동자는 복지와 상여금을 반납하며 대우조선을 살렸다. 진짜 주인인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대우조선이 생존하는 길이다"라고 제안했다. 여영국 의원은 "국회에서 기업결합 심사과정의 문제점을 따져보겠다. 이 당, 저 당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검증해보자"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경북본부장, 울산본부장, 경남본부장이 각 지역 조합원들을 대표해 연단에 올라 결의문을 낭독했다. 대표자들은 ▲밀실야합, 재벌 특혜 매각, 대우조선 매각 철회 ▲대우조선과 조선기자재업체 노동자 정리해고 분쇄 ▲문재인 정권 조선산업 정책 부재 규탄, 정책 마련 ▲국가 공적자금 손실 관계기관 처벌 등을 촉구하고 매각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결의했다.

콜텍지회, 교섭 재개 합의·본사 건물농성 해제

4월 15일 박영호 콜텍 사장 참가 직접교섭…지회,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한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노사가 오는 4월 15일 교섭을 다시 연다. 이번 교섭에 박영호 콜텍 사장이 직접 나온다. 콜텍지회는 교섭 재개 합의에 따라 본사 건물농성을 해제했다. 그러나 임재춘 조합원은 한 달을 넘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 콜텍지회와 사측은 4월 9일 20시쯤 교섭 재개에 합의했다. 박영호 사장은 "진전된 안을 들고 직접교섭에 나오면 본사 농성을 해제하고, 곧바로 집중 교섭을 벌이겠다" 라는 지회 요구를 결국 받아들였다. 임재춘 조합원 단식 한 달, 시민사회단체 연대 단식 농성 일주일만이다.

4월 9일 콜텍 본사 앞에서 지회와 연대 단체들이 집중문화제와 1박 2일 철야 행동을 진행 중 이었다. 교섭 재개 합의에 따라 문화제 도중 본사 건물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온 이인근 콜텍지회장은 "이번 교섭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 라고 결의를 밝혔다.

이인근 지회장은 "13년 동안 해고자를 방치한 사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기를 바란다. 박영호 사장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교섭에 임하기를 촉구한다" 라며 "성과 있는 교섭이 되도록 지회도 노력하겠다" 라는 견해를 밝혔다.

지회는 마지막 투쟁이라는 각오로 지난 1월 8일 강서구 등촌동 콜텍 본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본사 농성 이후 여덟 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박영호 사장은 "지난 13년 동안 내가 더 힘들었다. 단 하루의 복직도 안 된다" 라며 교섭을 파탄 냈다.

결국, 임재춘 조합원이 지난 3월 12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고 4월 2일 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지회가 교섭을 요구하며 본사 건물 옥상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튿날 시민사회단체들도 무기한 연대 단식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의 요구는 세 가지다. ▲부당한 정리해고 사과 ▲정년 되기 전 명예로운 복직 ▲해고 기간 정당한 보상 등이다. 지극히 당연하고 소박한 요구다. 현재 박영호 사장은 "대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해고" 라며 모든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늙은 노동자가 한 달 넘게 굶고 있는데…"

사회원로·시민·사회단체 대표, 문재인 정부에 콜텍 해결 촉구… "정리해고 도입한 민주당이 결자해지"

각계각층 사회 원로와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들이 '늙은 노동자의 단식과 농성' 에 연대 활동으로 호응했다. 이들은 정리해고제를 도입했던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콜텍 등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사회 원로와 시민·사회·종교단체 대표자들은 4월 9일 청와대 앞에서 '콜텍 정리해고 13년, 문재인 정부 해결 촉구 기자회견' 을 열었다. 이들은 콜텍 정리해고 문제 해결에 문재인 정부가 나서 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124개 단체 247명의 사회원로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대표자들이 서한에 서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1997년 민주당 정부는 국가 부도 사태에 따른 IMF의 요구라며 정리해고제를 도입했다. 한국은 2001년 8월 차입금을 모두 조기 상환하며 IMF 체제를 벗어났다. 그런데도 정부와 사법부 등은 IMF를 핑계로 만든 정리해고 요건을 점점 완화해 왔다" 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더 엄격하게 개정해 고용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집권 2년이 되도록 정리해고제를 폐지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있다" 라고 비판했다.

사회단체 대표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해외로 떠난 콜텍 자본에 국민 세금을 퍼붓고 있다" 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세계 일류상품' 으로 콜텍 기타를 선정해 기술과 디자인 개발, 금융, 인력, 해외 마케팅 등을 일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최장기 정리해고 사업장 콜텍 노동자들이 겪는 13년 고통의 원흉은 민주당 정부가 만든 정리해고제다" 라며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콜텍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